

연금개혁과 퇴직연금의 역할

목차

I. 고령화와 연금개혁 배경

II.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연금개혁 방향

III. 퇴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IV.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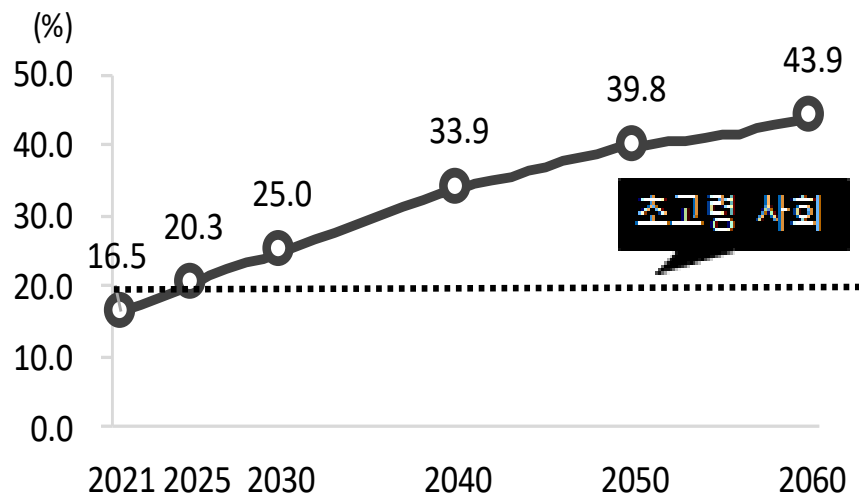
I. 고령화와 연금개혁 배경

1. 고령사회 도래와 원인
2. 복지재정 및 연금재정 악화
3. 노인빈곤과 노후자산 활용

1. 고령사회 도래와 원인

- (고령사회)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노인인구비중(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함
 - 고령화율은 '25년 20.3%(초고령사회) → '40년 33.9% → '60년 43.9%
 -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여(향후 연평균 30만 명 급감) 생산여력 둔화가 우려
- (원인) 2020년 기준 **기대여명**은 83.5세(65세 기준 21.5세), **합계출산율** 0.84명
 - 지난 30년 동안(1990~2020) 기대여명 11.8세(65세 기준 6.6세) 증가, 합계출산율 $\Delta 0.7$ 명 감소

고령화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A)

기대여명 및 합계출산율 추이

연도	기대여명 (세)				합계 출산율(명) ²⁾
	0세 (기대수명)	65세	70세	80세	
1990	71.7	14.9	11.7	6.8	1.57
2000	76.0	16.4	12.9	7.3	1.48
2010	80.2	19.1	15.2	8.6	1.23
2020 ¹⁾	83.5	21.5	17.3	9.8	0.84
	(11.8)	(6.6)	(5.6)	(3.0)	($\Delta 0.7$)

주: 1) ()안의 수치는 지난 30년(1990년에서 2020년)의 격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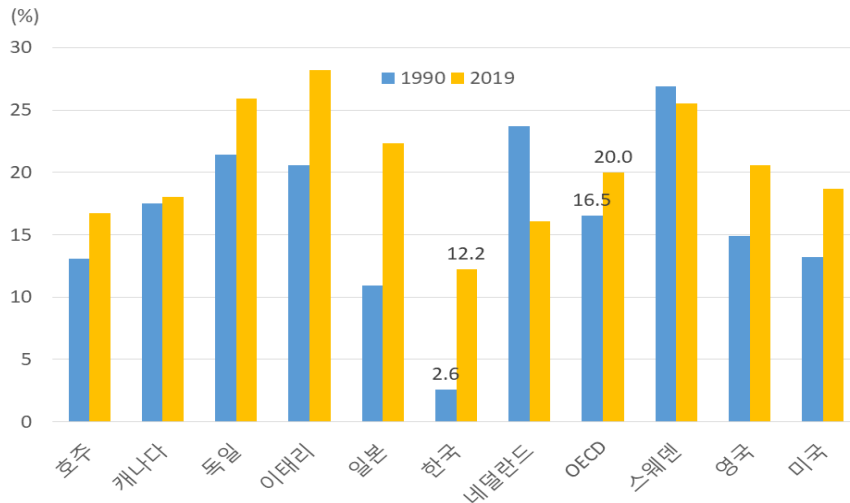
2) 가임여성 1인이 생애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임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통계청 KOSIS/완전생명표(1세별); 통계청(2021b)

2. 복지재정 및 연금재정 악화

- 노인빈곤과 복지욕구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 확대되었고, 복지재정은 급속히 팽창함**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 1990년 2.6% → 2019년 12.2% (OECD는 16.5% → 20.0%)
 -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총당부채까지 고려하면 **향후 연금재정 부담**으로 인한 국가채무는 심각
- * 2021년 국가부채(2,196조 원) 중 공무원/군인연금의 총당부채(1,138조 원)의 비중은 51.8% 수준 (기획재정부, 2022)

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 변화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2022)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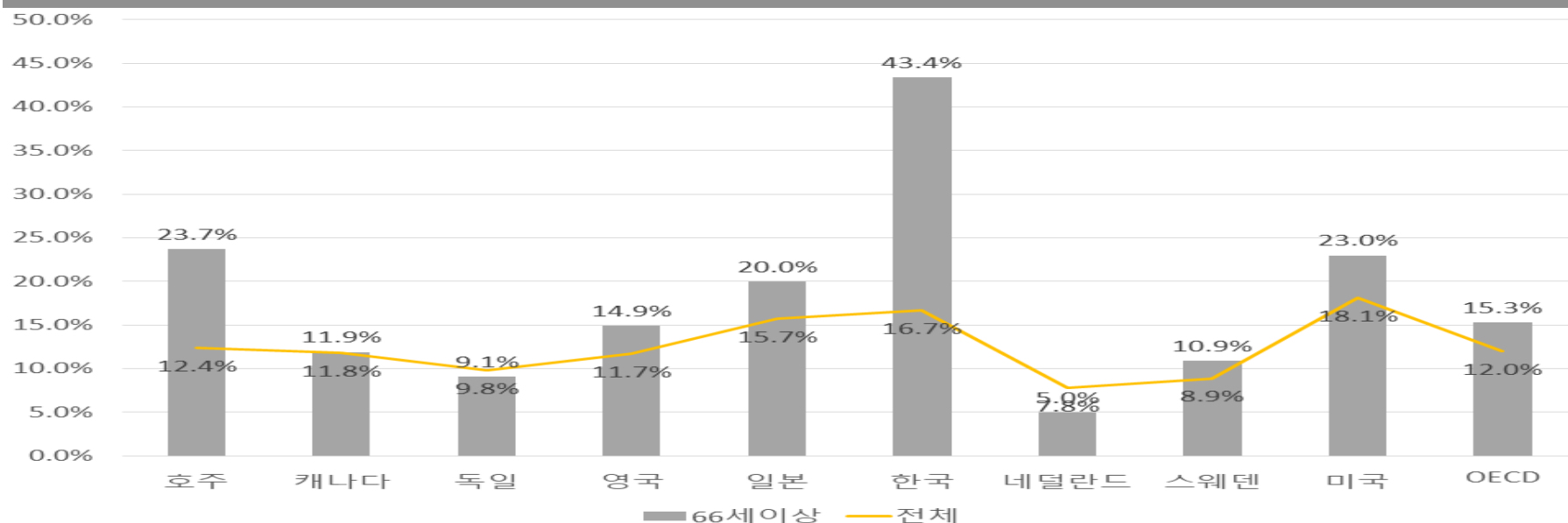


자료: 한국재정정보원(2022)

3. 노인빈곤과 노후자산 활용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나, 재정부담 문제로 인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 선진국 노인빈곤율은 감소하여 전체빈곤율 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나(독일, 네덜란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OECD 15.3%, 2018년)로 가장 높음
- 이에 노인빈곤율, 공적연금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타 노후자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 (2018년)



주: OECD는 36개국의 평균임
자료: OECD(2021)

II.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연금개혁 방향

1. 노후소득보장체계
2. 공적연금 평가
3. 연금개혁 방향

1. 노후소득보장체계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되며, 공적연금에 비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미한 편임
 -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됨
 - 공적연금 외 노후소득원으로 **퇴직·개인연금, 역모기지** 등이 있음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보험료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역모기지(주택·농지연금)		
		2층	퇴직연금	IRP(2017~)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조세		0층	기초연금		
소득원	대상		근로자	자영자 등	공무원 등 직역가입자

2. 공적연금 평가

• 사각지대의 범위가 넓고 수급률과 급여수준이 낮음

- (사각지대) 경찰인구 대비 납부자 비율은 '17년 65.6%(1,821만 명/2,775만 명), OECD 83.6%.

* 미국 90.4%, 영국 88.7%(S2P), 일본 97%(국민연금) 등

- (수급률/수급액) 국민연금 수급률(65세 이상)은 '20년 38.3%이고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급여수준은 높지 않음

-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월 56만 원 (소득대체율 20.9%, 2021년)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적연금 가입률 국제비교

미국	영국	독일
90.4% (`14)	88.7% (S2P, `12)	100.0(총가입자) 68.3%(능동가입) (`14)
일본	스웨덴	한국
97%(국민), 51.0%(후생) (`10)	99.0% (`08)	65.6% (`17)

국민연금의 수급률 및 급여수준

- 65세이상 수급률은 '20년 38.3%, '30년 48.0%, '50년 7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법정 소득대체율 감소 : 70%→60%→40%(2028)
 -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더 낮음
- 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 노령연금수급자 평균연금액의 A값 대비 소득대체율은 약 20.9% 수준(A값 268만 원, 평균수급액 56만 원)

2. 공적연금 평가

- **저부담·고급여**의 제도구조적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재정불안정** 문제가 지속됨
 - (제도구조적 문제) **보험료율 9%**, **법정소득대체율 40%**, 수익비 1.8배 (OECD : 18.2%, 42.2%)
 - (사회경제적 요인)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기술진보(AI 등) 등에 따른 **노동 대체 현상**은 향후 국민연금 가입 및 재정적 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국민연금의 재정문제와 대책	
재정추계 결과	
과 (4차 재정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2년 당기적자 • 2057년 기금소진
불안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부담, 고급여(수지불균형) • 저출산, 고령화
개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율 인상 • 급여수준 유지(기초연금 강화)

보험료율, 급여수준, 배율의 국제비교		
구분	한국	OECD 38
보험료율	9.0%	18.2%
급여수준	40%	42.2%
배율	4.4 배	2.3배

자료: OECD(2021), Pensions at a Glance. . p.141, p.197

2. 공적연금 평가

- 연금개혁 늦을수록 국민연금 **재정불안정 확대**되고, 기초연금 확대는 **새로운 재정문제**를 초래할 우려
 - 2007년 개혁으로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소진시점 연장, 추가 개혁 없어 소진시점은 당겨짐 (60년 → '57년 → 54년)
 -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현 노인층의 빈곤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기초연금 급여인상은 새로운 재정부담 우려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추계시점 (A)	적립금 소진시점 (B)	적립금 보유기간 (B-A)
2003년(제1차)	'47년(△96조 원)	44년
2008년(제2차)	'60년(△214조 원)	52년
2013년(제3차)	'60년(△281조 원)	47년
2018년(제4차)	'57년(△214조 원)	39년
2019년(예산처)	'54년(△164조 원)	35년

자료: 제1차~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함

연도별 기초연금 지급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급액(조 원)	4.3	6.9	10.0	10.3
증가율	-	61.3%	45.1%	2.8%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급액(조 원)	10.5	11.8	14.7	16.8
증가율	2.5%	12.1%	24.5%	1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기초연금지출현황

3. 연금개혁 방향: 공사연금 역할 분담

• 재정문제, 사회경제적 환경, 세계화 추세를 고려 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 한계**

➔ 적정노후소득 수준 달성을 위해 공사역할 분담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요

- 적정소득대체율 70% 가정 시 국민연금 30~35%(기초연금 10% 포함)로 예상되어 추가적 노후자원 확보 필요

- 노후소득보장 강화 위해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활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선진국 연금개혁 정책을 고려하면 **사적연금 활성화(특히, 퇴직연금)**가 우선시 될 필요 있음

연금개혁 방향: 공사연금 역할 분담

구분	공적연금	사적연금(퇴직연금)
목표	제도 내실화, 재정안정 노력	적정노후소득보장, 맞춤형 소득보장
역할 분담	법정소득대체율 40% 실현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	목표소득대체율(70%) 실현 지원 소득계층별 적정 소득보장
주요 대상	중산층 이하	중산층 이상(소득활동 저소득층 확대)

〈참고〉 고령화 단계별 연금정책 방향

고령화 단계별 연금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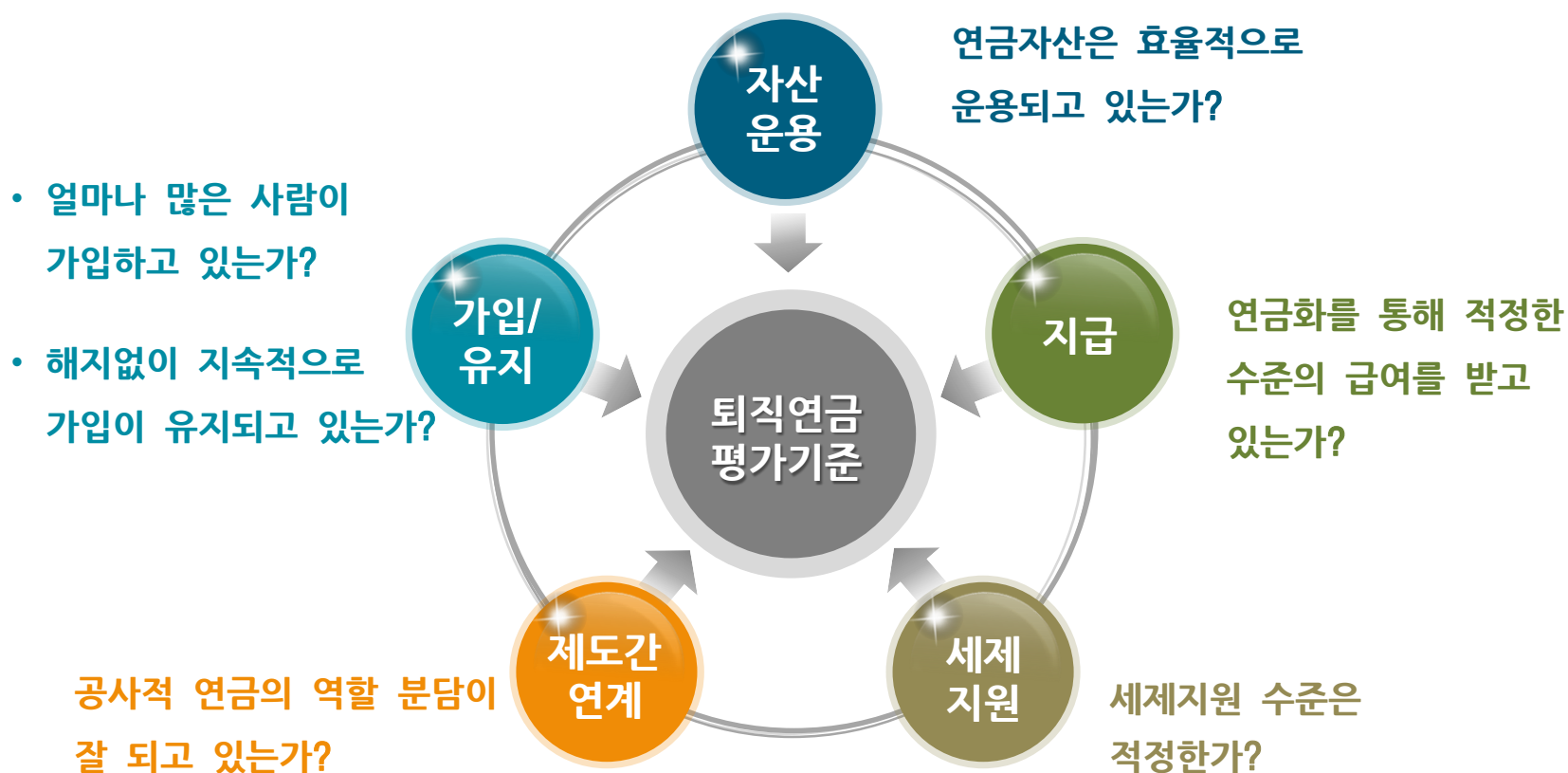
구분	시기	특징
고령화사회 (고령화율 7%~14%)	2차 세계대전~1970년대 (우리나라: '00~' 16)	-공적연금 중심 노후소득 보장 팽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연금 적용대상 확대(자영자 포함한 전국민) 기초연금도입 등 연금수급대상 확대 연금급여와 보험료 동시 인상
고령사회 (고령화율 14%~20%)	1970년대~현재 (우리나라: '17~) *1970년대 오일쇼크 등	-공적연금 급여완화 및 사적연금 활성화 등 조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경기침체와 급속한 고령화로 1980년대 공적연금 재정문제가 심화 공적연금의 민영화, 사적연금 활성화(보조금, 세제 혜택) 등 연금수령시기 연장, 연금급여 축소, 보험료 인상, 자동조절장치 도입 등
초고령사회 (고령화율 20% 초과)	현재 2개 국가 해당 일본 ('06~), 독일 ('10~)	-고령사회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유지하되,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여 선별적 노후소득보장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III. 퇴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도입률/가입률, 유지율 낮음
2. 낮은 수익률, 자산운용 여건 취약
3. 낮은 연금화 및 저소득보장
4. 낮은 세제지원, 세제차등화 미흡
5. 공사연금제도 간 연계성 부족

퇴직연금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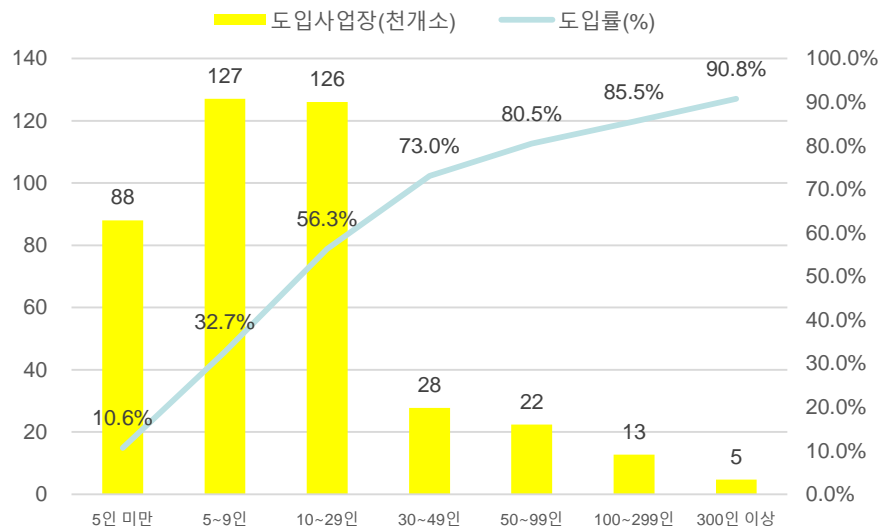
- 퇴직연금의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



1-1. (가입·유지) 도입률 및 가입률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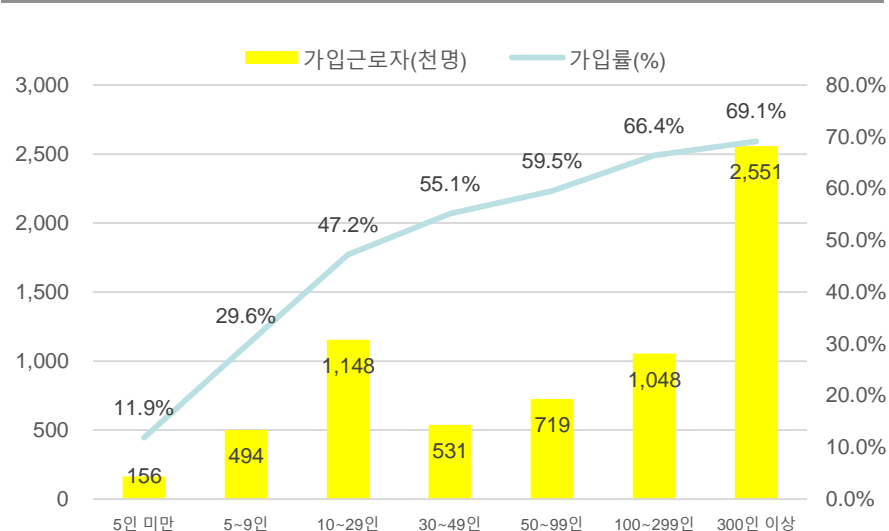
- 퇴직연금 **도입률과 가입률은 낮은 편**이며, 특히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일수록** 도입률, 가입률이 낮음
 - 도입률 ('20년)은 27.2% (5인미만 10.6%, 10~30인미만 56.3%, 300인 이상 90.8%)
 - 가입률 ('20년)은 52.4% (5인미만 11.9%, 10~30인미만 47.2%, 300인 이상 69.1%)
- 퇴직급여 미설정시 퇴직금 설정으로 간주하므로 퇴직연금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함(퇴직급여법 제11조)

사업장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2020년, 천개)



자료 : 통계청(2021), 2020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

사업장규모별 퇴직연금 가입 현황 (2020년, 천명)



자료 : 통계청(2021), 2020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

1-2. (가입·유지) 해지 등으로 유지율 낮음

- 근로자의 이직이 잦고 IRP 계좌로 **이관 후**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해지**되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 평균근속기간 6.7년(2019년)을 고려하면 생애근로기간 동안 4~5회의 이직이 예상됨
 - 이직 시 IRP 계좌로 이관한 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이관성이 취약함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관 및 해지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IRP 이관			IRP 해지			
	인원(명)	금액(억 원)		인원(명)		금액(억 원)	
'15년	784,530	106,649	<1,359>	717,155	(91.4)	94,699	<1,320>
'16년	788,389	106,801	<1,355>	739,807	(93.8)	105,762	<1,430>
'17년	779,187	114,529	<1,470>	749,625	(96.2)	100,726	<1,344>
'18년	836,944	124,825	<1,491>	845,943	(101.1)	108,470	<1,282>
'19년	844,123	138,982	<1,646>	864,801	(102.5)	112,463	<1,300>
'20년	858,203	151,670	<1,767>	842,821	(98.2)	110,521	<1,311>
합산*	4,891,376	743,456	<1,520>	4,760,152	(97.3)	632,641	<1,329>

주: 1) < >안은 1인당 이관 및 해지금액임(단위: 만 원)

2) ()안은 이관인원 대비 해지인원 비율로 해지율임(단위: %)

3) *은 '15년~'20년까지의 합산한 수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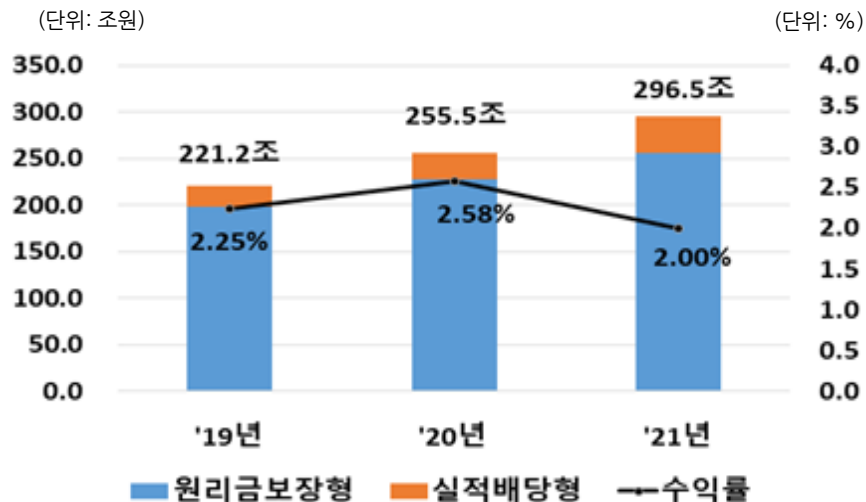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통계청(2019); 통계청(2021c); 강성호(2020)

2. (자산운용) 낮은 수익률, 자산운용 여건 취약

- **안전자산 선호**로 수익이 낮고,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원리금보장형 운용비중은 감소추세이나 2020년 적립금의 89.3%(대기성 자금 포함)는 원리금 방식으로 운용됨
- 2021년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2.0%이며, 주식시장 변화 등 금융환경에 매우 민감함
(19년 2.25%→'20년 2.58%→'21년 2.00%)

최근 3년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수익률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2. 4. 17),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통계

공사적 연금 수익률 비교

구분	퇴직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0년	5.03	10.37	8.24	10.77
'12년	4.65	6.99	3.06	6.62
'14년	3.04	5.25	3.35	2.63
'16년	1.58	4.69	3.72	3.91
'18년	1.01	-0.92	-1.70	-2.45
단순평균	3.02	4.96	3.58	4.46
'16~'18년 3년평균	1.49	3.68	3.02	3.55

자료: OECD(2014)
'16~'18년 3년간 동안의 실질 투자수익률임

3. (지급) 낮은 연금화 및 저소득보장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되고 있음
 - 2021년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 수령 비율은 4.3%
 - 적립금이 적을 수록 일시금을 수령함 (일시금 1천 6백만원, 연금 1억 9천만원)
- 우리나라 사적연금은 연금화 전환이 미흡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
 - 퇴직연금을 **충실히 가입(가입기간 30년)**하는 것을 가정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3.0%**로 추정
 - 해지, 실업, 조기퇴직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실현소득대체율은 이에 **훨씬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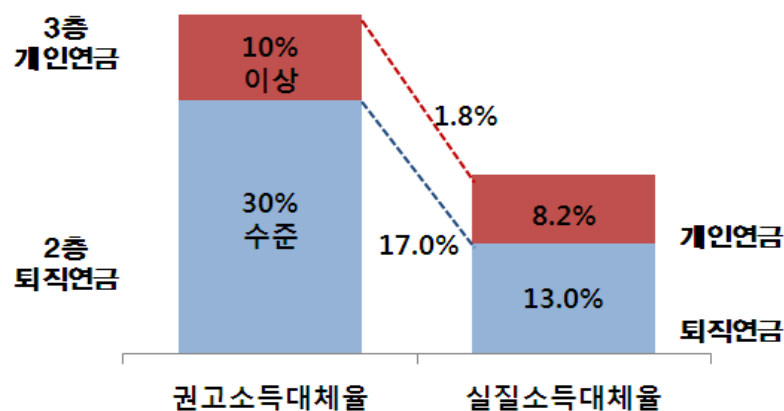
퇴직연금의 수급형태별 수급 현황(2021년)

(단위: 좌, 억 원, %)

내용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전체
계좌 수(A)	16,984 (4.3)	380,286 (95.7)	397,270 (100.0)
금액(B)	32,028 (34.3)	61,398 (65.7)	93,426 (100.0)
계좌당 금액(B/A)	1.89	0.16	0.24

자료: 금융감독원(2022),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통계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주: 사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 개인/퇴직연금수익률은 협회홈페이지 참조
자료: 류건식(2013)

4. (세제지원) 낮은 세제지원, 세제차등화 미흡

- **세액공제 전환** 이후 연금세제(IRP, 연금저축) **지원수준이 더욱 감소**하여 IRP 가입유인이 낮음
 - 연금세제 지원수준은 DB, DC형 각각 납부액 대비 17%, 14%(OECD 26%, OECD 2016)
- 가입자의 특성(면세자, 주부, 퇴직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과세체계 (소득기준만 적용)**
 - 두 단계의 세액공제율 (12%, 15%), 면세자에 대한 세제혜택 없어 연금저축 가입유인 떨어짐
 - 퇴직직전세대(50세 이상)에 대한 추가연금세제를 2022년까지만 적용 (미국, 호주: Catch-up Policy)
- 연금화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이 미흡하여 **연금수령 유인이 낮음**
 - 퇴직소득공제율: 50.3% → 과세율: 일시금 수령시 4.4% vs. 연금 수령시 1.2% 추정(보험연구원(2017))

IRP 및 연금계좌 세제혜택

납부시

납부액 한도 : 연간 900만 원 (연금저축 납부액 포함)

* 700만원 → 900만원 상향 (50세 이상 추가 200만원 삭제)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1억원 한도)에 대해 IRP 추가납입 허용

세액공제율 :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보험료 전액 손비인정('16년 이후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 폐지)

운용/수령시

(운용 시)운용수익에 대해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

(수령 시)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3~5%

* 연금소득 요건: 5년 이상 불입, 55세 이후 인출, 10년 이상 분할 인출

(수령 시)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종합과세 혹은 15% 분리과세

5. (제도 간 연계) 공사 연금제도 간 연계성 부족

- 적정노후소득보장 수준 등 **목표 수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제도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없고, 연금 간 노후소득보장 목표가 모호
 - 선진국 연금개혁 과정에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통해 공사연금제도간 연계성을 제고
 - * 독일 리스터연금(2001년), 스웨덴 프리미엄연금(1998년), 영국 NEST 퇴직연금제도(2012년) 도입
- 부처별 별개로 운영되어 **공사연금 간 연계**를 통제할 **기구 부재**
 - 연금포털사이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 차원의 연금자산 확인이 가능하나, 총연금자산 과부족 시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부재

선진국의 연금개혁과 공사역할분담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 연금급여수준 축소,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 * 연금급여수준 축소: 독일 70% → 53%, 일본 70% → 59%
- * 수급개시연령 조정: 미(84년, 65→67세), 독(07년, 65→67세), 일(00년, 60→65세)

• 구조개혁: 기존제도의 틀 전환

- * 스웨덴: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폐지 후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비례연금 전환(98)
- * 칠레 등 남미국가 공적연금 민영화 추진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강화

- * 영국: 연금크레딧, 독일: 노인·장애인 전용 기초보장제도, 스웨덴: 최저보증연금제도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 세제지원형 사적연금 도입

- * 독일: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 * 스웨덴: 프리미엄연금

• 사적연금 가입의무화

- * 영국의 NEST 연금제도 등

IV.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1. 퇴직연금 일원화/연속성 강화
2. 자산운용 여건 개선 및 제도 인식 개선
3. 자동연금수급
4. 세제지원 강화
5. 공사 연금제도 간 연계성 제고

1. 퇴직연금 일원화/연속성 강화

• 퇴직연금 일원화 및 가입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

-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 (신규사업장에 우선 적용 등 단계적 접근)
- 영세사업장에 대해 운영경비 지원 등을 통해 제도 수용성 제고

• 이직 후 계좌 해지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 강화

- 정년시점(55세 -> 60세)까지 연금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강제
- 긴급자금 필요 시 퇴직급여 담보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조치

퇴직연금 일원화

- 퇴직금제 폐지 및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신규사업장에 우선 적용 등)
-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 가입 확대 내실화 제고
- 퇴직연금 조기 도입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제도연속성 강화

- 정년시점(55세 -> 60세)까지 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강제
- 이직 시 IRP계좌로 이전된 후 인출 가능하지 않도록 제도 변경
- 긴급자금 필요 시 퇴직급여 담보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조치

2. 자산운용 여건 개선 및 제도 인식 제고

• 자산운용시스템의 효율화 등 자산운용 여건 개선 및 수급권 보호 강화

- 고수익 투자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시스템 개선
- 자산운용시스템 효율화, 수급권보호를 위해 OECD 기준에 준하는 감시기능체계의 개선

• 제도 및 투자교육 강화를 통한 제도 인식 제고 등

- 퇴직연금 제도 교육을 통한 가입자 인식 제고
- 수익률 제고 및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자·소비자 대상 투자교육 강화

운용 시스템 개선/ 수급권보호

- 적극적 투자에 상응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시스템 효율화 필요
-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 부여 등을 통한 수탁자 감시기능 상시화
 - 2022년 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등 적극적 투자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투자 손실에 따른 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효율화 필요

투자교육 강화

-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 및 투자교육 관련 현행 규정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조치
-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투자교육 의무화 및 가입자 교육 강화
 - 은퇴교육을 포함한 종합적 가입자 교육으로 전환

3. 자동연금수급

- 정년시점에 맞춰 연금 수령이 될 수 있도록 **수령연령 조정**

- 정년의무화 연령(60세)을 고려하여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수령연령을 상향 조정

- **자동연금수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화 유도

-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제도화 (일본: 일시금지급숙려제도)

수령연령 조정

- 정년시점에 맞춰 연금 수령이 될 수 있도록 수령연령 조정
- 정년의무화 연령(60세)을 고려하여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수령연령을 상향 조정

자동 연금수급

- 수급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제도화
- 일본의 일시금지급 숙려제도를 참고하여 연금수급 후 일정기간(예, 5년)이 지난 후에 긴급자금 필요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Opt-out 허용)

4. 세제지원 강화

• 세제혜택 확대 및 차등화로 가입 유도, 연금화 유인을 위한 세제정책 추진

- OECD국가의 퇴직연금 세제지원비율을 고려하여 세제지원 수준 상향
- 세액공제대상소득 상향조정, 가입자 특성별 세제혜택 차등화,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 강화

가입 유도

- OECD국가의 퇴직연금 세제지원비율을 고려하여 세제지원 수준 상향
- 가입자 특성별(면세자, 주부, 퇴직자, 연령, 소득수준 등) 세제혜택 차등화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독일: 리스터연금),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50세 이상 퇴직직전세대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 상시화(미국, 호주 : Catch-up Plan)
 - 퇴직연금 도입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운영경비 등에 대해 대출금리 지원

연금화 유도

-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이를 연금화 전환 재원으로 활용
 -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들은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고 연금 수령을 의무화

5. 공사 연금제도 간 연계성 제고

• 공사연금 역할분담과 공사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조직 구성

- 목표소득대체율(예, 70%)을 논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연금 역할 분담 방안 강구
- 공사연금 제도 간 연계와 이를 관리 감독할 컨트롤타워(예, 대통령 직속 전담조직) 구성 필요

공사 역할 분담 명확

- 노후소득보장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평균소득자 혹은 중위소득자 기준 목표소득대체율 수준 설정
-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 수준을 보다 구체화
 - 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 목표소득대체율을 30~35%(혹은 40%)로 설정할 경우,
 - 사적연금은 35~40%(혹은 퇴직연금 20%)를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소득대체율 70% 달성

컨트롤타워 구성

- 부처 간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
 - (현행체계) 부처별로 나누어 관리 (복지부: 국민연금, 노동부: 퇴직연금, 금융위: 개인연금)
 - (개선방향) 대통령 직속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

감사합니다